

지방재정 스크랩

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

지방자치단체내에 하나의 부서로 운영되던 전국 97개 자치단체의 상수도 또는 하수도 사업 부문이 내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분리, 전환돼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말 현재 원가의 73.7%와 53.3%에 그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은 각각 26.3%와 46.7%씩 점진적으로 인상돼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상·하수도 사업의 생산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하루생산능력이 1만5천t 이상인 25개 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과 하수처리장을 갖춘 72개 자치단체 하수도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 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치단체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오

는 12월까지 조례와 규칙을 제정, 공포하는 등 상·하수도 사업부문이 내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게 된다.

상수도가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자치단체는 충청북이 8개, 경남북과 전남북 각 6개, 강원 3개, 경기 2개등이며 하수도의 경우는 서울 1개를 비롯, 경기 18개, 강원 6개, 충북 4개, 충남 5개, 전북 5개, 전남 8개, 경북 10개, 경남 14개, 제주 1개이다.

공기업으로 전환된후 상·하수도 요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비용과 수입을 추정해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현재의 요금수준이 원가보다 많이 낮은 실정이어서 점진적으로 크게 인상될 게 확실하다.

공기업은 사장격인 관리자에 부시장, 부군수 등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국장급이 임명되며 독립적인 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전담 공무원 1명을 두는등

조직이 종전보다 커지게 된다.

한편 요금이 인상되면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상태가 건전해져 그동안 문제가 됐던 노후 수도관교체 등 각종 시설투자가 활발해져 수질개선 등 서비스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97개 자치단체의 상수도 또는 하수도 사업부문의 공기업 전환으로 상수도는 전체 167개 사업부문중 119개, 하수도는 94개 전 사업부문이 공기업이 된다.

[경향신문, 2001. 5.13]

지자체 '물가대책상황실'운영

앞으로 요금을 올리는 목욕탕이나 이발소, 음식값을 올리는 음식점 등은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터넷에도 요금인상 업소로 게재된다.

정부는 최근 물가 급등세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물가안정을 위해 시도별로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해 개인서비스 요금을 억제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최근 물가가 급등 추세에 있어 서민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있고 경제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각 자치단체에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안정 기반 강화 차원에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4월말 현재 물가는

2.0% 상승에 그쳤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2.5%로 0.5%포인트 더 높아졌음을 지적하면서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현장에 투입해 지방물가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과 지하철,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 요금 등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협정요금인 목욕, 이발 등 개인서비스요금과 갈비탕 등 음식 가격도 업소들에 대한 위생검사와 세무조사 등 간접규제방식을 동원해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통 설이나 추석, 하계휴가철 등에만 지자체별 물가대책상황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는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특별히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상황실이 가격을 관리하게 되는 품목은 통계청이 선정해 가격을 점검하는 509개 품목중에서 지자체들의 가격 관리가 가능한 갈비탕, 찜뽕, 이발료, 목욕비등 49개 품목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3개월간 지자체별 물가대책상황실로부터 매주 물가동향 관련보고를 받게 된다. [문화일보, 2001.5.16]

재정 패널티-인센티브제 도입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 패널티 및 인센티브제

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을 연내개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하는 이른바 ‘패널티’제도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들에 대한 교부세를 증액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이들 법에 명문화해 지자체 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교부세를 대폭 삭감할 경우 지자체 재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고 한정된 예산에서 일부 단체에 대한 교부세를 대폭 증액할 경우 다른 단체에 내려갈 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 제도로 인한 교부세 증감폭은 10% 정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행자부가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하고 추진중인 재정 패널티제는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나 상급 지자체의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심사받은 내용과 달리 집행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않고 채권을 발행한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각종 재정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자치단체에 보조해주는 교부세를 감액한다는 내용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자치단체 해당공무원들을 징계하거나 형사문제일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이같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

면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삭감하는 벌칙이 법적으로 보장돼 효과적으로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를 개발해 전시성 행사개최 등으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일정한 패널티를 주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올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정도를 등급화하거나 점수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매일, 2001.5.9]

정통부경남도 업무효율 으뜸

- 중앙부처·광역단체 평가

정보통신부와 경상남도가 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12일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실적을 점검·평가한 결과 정통부와 경남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중앙부처 중에서는 환경부·해양수산부·국방부가, 광역단체로는 충남·도·경북도·전남도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순회결재 및 토의식 동시 결제 제도 시행으로 실·국장의 불필요한 결재

시간을 줄이고, 도지사 권한의 하부 위임, ‘사이버위원회’ 운영,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의 실시간 방송 등 모든 분야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정통부는 내부업무의 전자화디자털화,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각종 위원회 정비 등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실적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매일, 2001.4.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자체 재정난 골머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 매수청구권 발효를 앞두고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보상재원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토지가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 소유자는 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매수 청구를 받은 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산부족 등으로 매입하지 못하면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라도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보상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자치단체마다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모가 적게는 7만㎡(부산시)에서 많게는 8,810만㎡(전남)에 달한다.

예상 보상금은 사·도와 지역별 토지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공시지가 기준으

로 부산시의 경우 3조7,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시 1조5,000여억원, 전남 1조7,000여억원, 경남 7,280여억원, 강원 7,247여억원 등 엄청난 액수다.

이에 각 자치단체들은 보상규모를 줄이거나 보상시기를 분산하는 묘안찾기에 나서는 한편 보상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 등 각 자치단체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공공시설물 설치가 계획된 지역 등을 우선 보상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하는 등 우선순위와 예산형편에 따른 보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울산, 대구, 부산, 경남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상금 마련은 엄두를 못낸채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는 5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며 지방교부세 증액 등 정부의 국고지원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매일, 2001.5.15]

지자체 개혁, 체계적 추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자체가 20억~30억원 이상 투입되는 투·융자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타당성 심사를 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등 지자체 개혁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대통

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의 지자체 개혁반에서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중앙정부는 사업기능이 있는 기관에 대해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잘못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본부 등 23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지방정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군·구 등 지방정부의 성과를 서로 평가, 비교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의 재정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심사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쓸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재정패널티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대한매일, 2001. 5. 16]

지자체고유사무 국고지원중단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된다.

또 보조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고 예산편성과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조금통합신청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16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

혔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하고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상호전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차관은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금, 기초생활보장 등 필수 증액요소가 크게 늘어 내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일보, 2001. 5. 21]

국고보조금기초생활보장제등 재정관련 20개 제도 개선

정부는 국고보조금 제도, 중소기업지원과 농어업 융자제도 등 예산과 관련된 20개 과제를 개선키로 했다. 예산낭비를 막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예산증가는 많지 않지만 쓸 곳은 많기 때문에 재정시스템과 운영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로 20개를 선정해 재정(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해야하는데다 사회복지 등 늘어나는 예산수요에 적극 뒷받침하려면 재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는 판단에서다. 올해의 예산은 100조원이 넘는다. 예산을 1%만 효율적으로 사용해도 1조원의 예산절감이 있다는 얘기다.

개선과제는 연구개발(R&D) 투자의 성과 평가 등 철저한 성과평가가 필요한 분야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 효율화 방안 등 예산지원체계 개선분야 3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재정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 3개, 문화예산 지원기준 재정립 등 재정운영 원칙 설정분야 5개다. 또 지자체의 재정을 통합재정수지에 포함시키는 등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과 관련된 5개도 포함됐다.

예산처는 중소기업지원과 농어업 융자등의 부문에서 중복 지원되는 분야는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투자하려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요청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선정된 개별과제에 대해 자료 조사와 현장확인,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5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과 직접 관련된 개선사항은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한매일, 2001. 3. 14]

지역간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별로 편성해 집행되는 지역개발 예산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지역개발사업을 지역균형특별회계로 묶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5조~1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계자는 “매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아직 기획예산처 등의 관련부처와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함될 대상사업과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예산과 사업이 대부분 포함되며,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매일, 2001. 5. 28]

한국 1인 국민소득 세계 54위

세계은행 2001세계 개발지표

우리나라의 명목국민총소득(GNI)은 세계 13위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50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이 입수, 발표한 세계은행(월드뱅크)의 ‘2001 세계개발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중 한국의 명목 GNI는 3,979억달러(세계 13위)로 98년(12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GNI 규모는 미국의 4.5%, 일본의 9.8%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계 경

제규모 순위는 미국이 8조8,800억달러로 1위였고 일본이 4조550억달러로 2위, 독일이 2조1,040억달러로 3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9,800억달러로 7위였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490달러로 세계 54위를 기록했다. 이는 슬로베니아(1만달러), 아르헨티나(7,550달러) 등과 비슷하나 싱가포르(2만4,150달러), 홍콩(2만4,570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선·후진국간 소득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국가군(64개국)의 1인당 GNI평균이 420달러로 전년보다 19.2% 감소한 반면 고소득국가군은 2만6,440달러로 3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선·후진국간 소득격차는 전년의 49배에서 63배로 확대됐다.

9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1,298억달러) 규모는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여성비율은 41.2%로 77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45.8%로 42위, 일본은 41.3%로 76위였다.

예상수명은 한국이 73세(52위), 미국 77세(22위), 독일 77세(22위), 북한 60세(140)로 나타났다. 예상수명 1위국은 81세로 나타난 일본이었다. [한국일보, 2001.5.20]

구로구광명시 협력행정, 협오시설 ‘빅딜’ 공동변영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 거

부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서울 대부분의 구청 관련공무원들은 쓰레기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며 한숨만 내쉬기 일췌다.

하지만 서울 구로구는 지난해부터 쓰레기 대란이 ‘남의 일’이 됐다. 그렇다고 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오로지 지난해 경기 광명시와 이루어 낸 ‘환경빅딜’ 덕분. 구로구의 쓰레기는 광명시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광명시에서 나오는 하수는 서울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국내 초유의 협약이 지난해 4월 체결됐다.

빅딜의 효과는 대단했다. 우선 시설 중복 투자를 예방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절감됐다. 구로구는 당초 하루 200여t씩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600억원을 들여 관내에 소각장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빅딜을 통해 소각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광명시에 시설지원비 270억원만을 지원, 무려 330억원을 고스란히 절감했다.

광명시는 그보다 더 큰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 시는 당초 관내에 945억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 하루 18만t정도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빅딜로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대신 예정부지에 경륜장 유치계획을 짜놓고 있다. 거의 1,000억원에 달하는 주민세금을 절약하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경륜장까지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경빅딜은 또한 두 지역에 돈으로 계산

할 수 없는 부수 효과를 안겨주고 있다. 혐오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님비현상과 자치단체가 분쟁에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빅딜 3개월 후인 지난해 7월 경기도 과천시와 김포시도 쓰레기소각장을 공동건설, 함께 사용하기로 했으며 빅딜을 합의했으나 쓰레기 반입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과천시와 의왕시도 협의를 통해 소각장을 본격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혐오시설 공동사용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한매일, 2001.4.18]

서울시 체비지 매각 엄격 제한

앞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의 수익계약에 의한 매각이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14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비, 기존 ‘서울시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징수조례’와 ‘서울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칙’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수익계약을 통해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돼 지금까지와는 달리 체비지 매각때 적용해 온 수익계약 조건이 한층 강화된다.

또 체비지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장물이 있는 체비지는 매각대금의 5%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등이 점유하고 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체비지를 대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공용청사 등의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체비지를 신탁에 의해서도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6월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심의한 뒤 7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매일, 2001. 5. 15]

서울 강북구청 선진 환경행정

음식쓰레기 배출 ‘0’

서울강북구에서는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를 악취를 풍기며 김포 매립지까지 운반하지 않는다. 토양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방식으로 대부분 가정에서 각각 처리, 찌꺼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마다 사과상자 2배 정도 크기의 스티로폼 ‘발효상자’나 마당의 1㎡ 남짓한 소규모 발효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단독주택 3만6,000여 가구 가운데 3만3,000여 가구가 발효상자나 마당의 ‘간이발효장’에서 처리한다.

각 자치구가 구제역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골치를 썩고 있지만 강북구에서는 발효처리로 가정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덕에 걱정이 없다고 윤유중(尹柔

重)청소 행정과장은 말했다. 수거·운반 비용을 제외한 매립비용만도 연간 2억원 가량을 절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정용 발효상자를 강북구가 본격 보급한 것은 지난해 4월, 하루평균 27t의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의 발효상자나 간이 발효장에서 자연스럽게 처리한다. 토양 미생물이 3~5일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 주기 때문이다.

2년 동안 사용해 왔다는 조의형(趙義衡·강북구 미아 3동)씨는 “악취나 침출수 문제도 없고 양도 늘어나지 않는 등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잘 발효처리됐으며 발효 처리에 이용된 흙을 화분 거름으로 다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사과 상자 2개 정도 크기의 ‘발효상자’ 하나면 처리가 거뜰하다. 지난해 가을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1주일 가량 쓰레기 반입을 금지했을 때 다른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북구에서는 가정마다 각각 처리,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구 관계자들은 으쓱해했다.

설치 효과가 좋아 지난해 서울시 차원에서 산하 전 구청에 구별로 1,000가구씩 시범 설치토록 하고 2억5,000만원의 예산도 지원했다. 부천시 오정구의 경우 강북구의 선례를 전수받아 2,000여 가구에서 이를 쓰고 있다.

발효 처리 방식은 지난 98년부터 강북구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소재의 한 농장 관계자들의 아이디어를 대중적으로 실용화한 것이다.

지난 99년 1,324가구에 시범 설치한 뒤 자신감을 얻어 지난해부터는 전 가구에 확대 보급하고 있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공터에 1m² 정도만 할애하면 되고 흙마당이 없는 집에서는 스티로폼 상자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은 뒤 ‘발효흙’을 덮고 3~7일 정도 지나면 쓰레기가 수분 등으로 소멸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쌀겨·깨묵·황토 등으로 만들어진 ‘발효흙’은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갈아주면 된다.

비용도 흙마당을 이용할 경우 3,000원, ‘발효상자’는 8,000원의 설치비면 된다. 발효흙이 추가로 필요하면 구청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유영석(劉永皙·수유5동)씨는 “생야채 등 익히지 않은 음식물과 염분이 많은 음식물의 발효기간이 길었지만 겨울에도 땅에 묻어놓고 발효흙을 덮어주니 잘 처리됐다”고 말했다.

장정식(張正植)강북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발효처리방식은 소각장 건설이 지역 이해 관계속에 더욱 어려워지고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개발과 사용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매일, 2001.4.18]

부산시 재정운영 최우수

부산시가 지방재정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지방재정운영상황 종합평가 결과,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부산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게 된다.

부산시가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재정 전망의 정확한 판단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 ▲세금의 효율적 활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한매일, 2001.5.18]

인천시, 택지·도시개발에 교통부담금 부과

인천지역에서 시행되는 택지·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9일 주택건설 등 교통난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 및 부담금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진행되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아파트 건설사업 등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물게 된다.

또 20가구 이상의 주택과 상가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공공사업

실시를 위한 이주용주택 건설, 민자유치 부대사업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 교통유발금을 내고 있는 숙박·위락·교육연구시설도 부담금이 면제되며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부과금은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m²당 표준개발비(22만6,000원)에 부과율(30%)·개발면적 등이, 주택건설은 m²당 표준건축비에 부과율(6%)·건축연면적 등이 곱해져 산출된다.

부과시기는 해당사업 실시계획·사업계획 승인 후 60일 이내며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준공시기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징수된 부담금 가운데 60%는 지방비로 쓰이고 40%는 국고에 귀속된다.

[대한매일, 2001.5.10]

부실운영 의료원장 해임키로

경기도, 운영조례 개정안 마련, 새달부터 6곳 경영평가 실시

경기도는 지방공사의료원들의 부실운영이 계속될 경우 원장을 문책·해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6개 의료원 대부분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나 경영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공사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마련, 도의회 의결을 거쳤다.

조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

도에 비해 당기순손실이 현저히 늘어난 경우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원장을 문책 해임하도록 했다.

도는 다음달부터 수원·의정부·금촌·이천·안성·포천 등 6개 의료원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한 뒤 조례규정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해마다 수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온 일부 의료원장의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9년도 경영평가 결과 수원·금촌·이천 등 3개 의료원은 4억4,000만~11억원씩의 적자를 냈다.

이에 비해 대구·인천·청주·포항·제주의료원 등은 최근 3년여동안 경영개선작업을 활발히 진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매일, 2001.4.24]

의정부시-양주군 '경기장 빅딜' 급류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군의 내년도 경기도체육대회 공동개최가 확정된 것을 계기로 종합운동장 공동사용을 목표로 추진해온 양 시·군 체육시설 빅딜이 급류를 타고 있다.

두 자치단체는 18일 양주군이 건설할 예정인 군립경기장을 의정부시가 건설중인 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으로 공동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빅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오는 24일 연다고 밝혔다.

빅딜이 성사되면 중복시설에 따른 예산을 절약, 지자체간 모범적인 예산절감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와 양주군간의 종합운동장 공동사용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거론됐으나 투자비의 차이가 큰 두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조건을 정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경기도가 내년 경기도체전의 주경기장이 될 의정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시설비 추가지원 입장을 밝히면서 중재에 나서 의정부시와 양주군이 똑같은 조건에서 두 시설을 공동 사용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대한매일, 2001.5.19]

